

# 대법원 2018도704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25.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그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 검찰국 소속 과장 겸 검사 2명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21. 법무 검찰국 소속 간부인 검사 3명(검찰국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이 참석한 만찬을 주재하면서 그중 과장 직책의 검사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현금 100만 원씩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5,000원 상당의 만찬 비용을 결제함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식물 및 금전 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 2명에게 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109만 5,000원

상당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됨

#### ■ 소송 경과

##### ● 제1심 : 무죄

- 음식물과 금전을 나누어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전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만 문제된다고 판단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 원심 : 검사 항소기각

- 음식물과 금전 모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의 의미를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가 동일한 공공기관 소속으로 직무상 명령·복종관계가 있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음식물과 금전을 제공한 법무부 과장 2명과 사이에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의 관계에 있음 →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

##### ● 검사가 상고를 제기함

## 2. 대법원의 판단

#### ■ 사건의 쟁점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 해석

-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음식물 및 금전이 위 조항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판결의 결과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확정)

#### ■ 판단의 근거

-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3. 판결의 의의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임